

# 光州日뢖



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222-8111 제21170호 1판 (음력 12월 14일) kwangju.co.kr 2020년 1월 8일 수요일

## 수도권 인구 전체 50% 돌파 文정부서도 지방은 서럽다

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0%를 돌파했다.

공공기관 지방이전, 세종시 건설 등 국 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 무현정부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정책이 마 련되지 않은 탓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 속화하는 모습이다.

7일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를 보 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,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. 이 가운데 50.002%인 2592만5799명이 서울과 경 기,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수도권을 제외한 광주·전남 등 14개 시· 도 인구는 2592만4062명으로 집계됐다. 국토 전체 면적(9만9720km)의 12%에 불 과한 수도권(1만1745km)에 사는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 보다 1737명 많은 것이다.

문제는 정부의 특단 조치 없이는 수도 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

통계청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원에게 지난 10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앞서는 상황은 매 년 이어지며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 구 비중이 51.6%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 48.4%보다 3.2% 포인트까지 많아질 것 다. 으로 관측됐다.

오는 2047년 국내 전체 인구는 4891만 1000명, 수도권 인구는 2525만4000명, 비수도권 인구는 2365만6000명으로 수도 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 160만명 많

지난해 12월 말 기준

전체 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 수도권 살아

수도권 공장 증설 막고

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펼쳐야

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. 당시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서는 시점을 2020년으로 봤으나, 실제로 는 지난해 말 현실화됐다.

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를 넘어 서는 '사건'이 벌어지자 균형발전국민포 럼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"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%를 초과한 것은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"라고 규정하 면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"망국 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 발전, 지방분권을 실현하라"고 촉구했

지역에서는 이명박・박근혜 정부는 제외 하더라도, 노무현정부 계승을 자임한 문 재인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되레 뒷걸 음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팽배하 다.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좌절됐으나 '수

도 이전'이라는 역대 가장 강력한 균형발 전 정책을 꿈꾸고, 혁신도시·세종시 건설 을 밀어붙였던 노무현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되레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.

강력한 균형발전 카드로 거론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진척이 없고, 수도 권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며 신도시만 조성 하는 모습을 보면서 "문재인 정부와 민주 당에게 지방은 안중에도 없느냐", "문재인 정권에 지방은 없다"는 날선 비판이 지역 민, 자치단체 공무원, 전문가를 가릴 것 없 이 쏟아지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이날 대통령 신년사가 특 히 주목됐지만 문 대통령은 "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생활SOC 투자도 역 대 최대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"는 한 문 장짜리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.

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"수도권 신도 시 조성,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고, 산하 기업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 500개를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"며 "위험 하게 들리겠지만 수도권 집중을 누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의 이름난 대 학 5~10개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과감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. 지금은 비 상상황"이라고 말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
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(庚子年) 신년사를 발표하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'큰 그림'을 국민들에게 소 개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·포용·공정을 통한 '상생도약',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'한반도 평화와 번영'을 국정 전반 을 관통하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.

### 남북관계 개선 통해 북미관계 이끄나

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제안 개성공단 재개 등 관심

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"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 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 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" 고 밝혔다.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 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으로,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문 대통령은 "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" 며 "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 다.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 또 "전쟁 불용・상호안전보장・공동번영이라는 한반 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 이에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"며 개성공단·금강산관광 재개, 접경지역 협

소금잇몸

력, 도쿄올림픽 단일팀 등의 스포츠 교류,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, 남북간 철 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제안했다.

문 대통령은 이어 "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며,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 한 시점"이라며 "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"이라고 강조했다.

특히, 문 대통령은 "2020년은 삶이 고 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 하는 해가 될 것"이라며 "이를 위해 국민께 서 포용·혁신·공정에서 '확실한 변화'를 제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 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"며 40대 퇴 직자•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 련,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, 여

도올 김용옥 '전남인재학당' 가보니 ▶2면

천득염의 건축인문기행 - 미얀마 ▶18면

▶20면 KIA, 안치홍 롯데 이적 후폭풍

AP 아로마퍼퓸 세트

29.900원

성·청년·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을 약속했다. 아울러 "올해 세계 경제가 점 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 되고 있으나 무역갈등,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"면서도 "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"고 언급

한편,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거론하며 "어떤 권력기관 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·제도적·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"고 강조했다.이와 함께 "부동산 시장의 안정, 실수요자 보 호,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 하다"며 "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

AP 로즈에디션 세트

28,900원

#### 공수처법 공포 의결 … 7월 설치 가시화

려 자양윤모 기프트

39,900원

####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

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. 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'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' (공수처 법) 공포안을 의결했다. 이에 따라 공수 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,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.

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 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

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, 공수처 설치 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

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, 검 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.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 약이기도 하다.

국무회의에서는 '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' 공포안도 의결됐다. 법안은 정당 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

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 선하는 한편,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 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, 이처럼 바뀐 '게임의 룰' 은 이번 4·15 총선에서 적용된다.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 보에 공포될 예정이다.

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'공직 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'을 심의・의결해 국회로 넘겼다.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 령으로 있던 '공무원 행동강령-이해충돌 방지규정'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, 행정부・입법부・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 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#### <u>amore</u>pacific ●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선물세트 ● • 3만원 이상 • 3만원 이하 H 순한 순한 CE STATE OF THE ST 저자극 더마 헤어&바디세트 려 동백&박하 에디션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6,900원 종합 3호 종합 4호 34,900원 32.900원 16,900원 21,900원 0 呂 (1.277) (1.471) 吕 0 93

정성가득 기프트

55,900원

사랑행복두배 기프트

49,900원